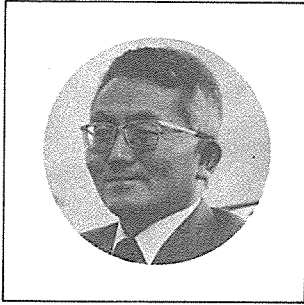


과학기술풍토 조성

“民族科學의 건설에 앞장서야”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교수 · 科學史)

지난 22년 동안 과총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립 10년 뒤에는 회관을 가지게 되었고, 예산 규모가 해마다 커지면서 사업의 크기와 종류도 다양화되어 왔다. 창립 당시 71개였던 회원단체의 수는 이제 2백을 넘게 되었고 그 활동범위는 국외에 까지 미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그동안 맡은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다는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 과총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과총은 우선 회원단체들의 유기적 단합을 통해 과학기술의 창달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 이 목표에 부수적이랄 수 있는 과학기술자의 자질과 지위향상, 회원단체의 육성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생활의 과학화 운동을 통한 국가발전에의 기여를 과총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들 목표는 결국 과학기술자의 지위향상, 과학기술단체의 조직, 그리고 대중에 대한 과학기술의 인식을 높이는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요컨대, 과총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조직화해 그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힘쓰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대중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는 셈이다. 말을 바꾸면 이것은 과학기술의 조직화와 과학기술의 대중화라는 두가지 목표로 압축할 수가 있다.

과총 22년의 역사는 과학기술의 조직화의 역사였고, 또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역사였다. 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성과가 그리 괄목할만한 것은 못 된다. 심하게 말하자면 과총주도 아래 만들어진 과학기술자들의 조직이란 조직으로서의 힘을 전혀 기르지 못한 채 정부의 보조금에 기생하는 정부 외곽단체에 머물고 있다. 말로는 1백만 과학기술자를 대표한다면서도 지금까지 과총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면 정부에 대한 “건의”를 거듭했을 뿐 아무런 압력단체로 작용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과총은 여러가지 행사를 통해 그런 방향감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렇다할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 추구하는 일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도움된다
고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국가의 예산
을 요구하고 재벌의 지원을 받는다. 그들이 추
구하는 예술 분야란 바로 인간을 보다 인간답
게 만드는 데 도움되는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과학기술도 예
술이나 똑같이 가장 인간다운 노력의 한 분야
이다. 당연히 과학기술자들은 그들의 하는 일에
대하여 예술가와 똑같은 자부심을 갖고 그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후원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과학기술은 예술이 갖지
못한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의 측면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을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야 할 이유
는 우선 그것이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
문이다. 그것이 경제발전에 도움되는 것은 과학
기술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기 보다는 부수적 측
면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과총은 보다 당당하
게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후원을 요
구할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과총이 앞으로 과학기술자들의 목소리를 높
이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이미 과학기술계
에서 일기 시작하고 있는 노조운동이나 그 밖
의 청년 과학기술자들의 의식화 운동에 눈을
돌릴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힘이
란 결국 잘 만들어진 조직으로부터 나올 수 있
다고 생각할 때 과총은 기존의 학회조직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향의 과학기술자 조직에 관심
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大衆化

과학기술의 조직화를 통해 그 힘이 길러진다
면 그것은 곧 과학기술의 대중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과학기술의 대중화는 이미 한 세기
전에 근대 서양의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강조 되어
온 과제였다. 19세기말 처음 이 땅에 근대 과
학기술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도층 인사들이 강조해 온 것은 바

로 과학기술의 대중화였다.

처음 과학기술의 대중화란 과학기술의 지식
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갖게 하자는 정도의 뜻
으로 알려졌다. 20세기 초까지의 한국인에게
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상
태였다. 초기의 과학기술 대중화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배워서 익
힐 것을 목표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
나 20세기에 들어와 과학기술은 실로 눈부신
발달을 거듭하여 지금은 어느 누구도 과학기술
의 내용을 폭넓게 배워 익힌다는 것은 불가능
한 상태가 되었다. 당연히 과학기술의 대중화도
그 방향을 수정하여 지식의 보급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시대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과학대중화운동은 아직 이와같은 <시
각의 전환>을 이룩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풍토조성에 앞장 서야 할 과총은 당
연히 이<시각의 전환>을 앞세워 새로운 과학대
중화운동의 기치를 높이 세워야 할 것이다. 그
것은 지금까지와 같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더
널리 보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전국
민이 자기의것으로 느끼도록, 과학기술에 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로부터 비롯 한
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은 서양의 것을 그대로 수
용하는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었
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좀 더 많은 지식을 좀 더 빨리 우
리 것으로 소화하기에 급급했을 뿐이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문화적 주체성에 손상을 입혀
왔는지를 반성해 보지 않았다.

예를 들면, 과총은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용어
정비와 보급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러나 그 노력은 아직 서양의 용어와 일본식 용
어의 비교검토 수준에 머물뿐이었지, 우리 전통
과의 연계성에는 대체로 무관심해 왔다. 앞으로
과총의 용어정비사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지
만 특히 이 일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옛
우리 고유의 용어를 개발 보급하고, 아울러 용

20세기의 과충이란 형식상 대단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이렇다할 힘도 영향력도 없는 기구였다.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과충이 지향할 바는 이미 그 목표로 내세운 일들을 보다 힘차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스스로를 다짐하고, 그 방법과 전략을 모색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과학기술의 조직화

주어진 주제는 과학기술 풍토조성을 위한 21세기의 과충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채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면서 대중에게 이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국가 예산을 더 쓰게 해 달라고 떠들어 보았자 효과는 적을 것이 분명하다.

결국 지금까지 과충이 목표하고 있던 과학기술의 조직화와 대중화란 바로 다름아닌 과학기술의 풍토조성을 위한 두 측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풍토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의 조직화를 위해서 과충은 다가오는 21세기에 어떤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과충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피기 어려운 정치적 사회적 조건 속에 성장해 왔다. 그 결과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과충은 과학기술자들을 조직하여 그것을 압력단체로 만드는 일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과충은 1백만 과학기술자들의 모임이라고 위세를 부리면서도 실제로는 그 숫자에 걸맞는 조직의 힘을 발휘하는 일에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과충은 지난 20여년 동안 해마다 끊임없이 정부에 대한 발언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이 발언을 훑어 보면 거의 모두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건의”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은 “건의”로 머물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같은 건의를 거듭함으로써 과충은 결

국은 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민주화 시대에는 과충은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적극적인 과학기술의 조직화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정치적 참여를 뜻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과충은 과학기술자들의 정치 참여에 극히 소극적이었다. 지난번의 총선에서 과충은 겨우 전국구 후보로 과학기술자들을 포함시켜 달라고 각 정당에 다시 “건의”를 낸 일이 있다. 하지만 여당인 민정당 조차 그 전국구 후보로 과학기술자를 뽑지 않았을 정도로 과학기술자들은 한국의 정치 현장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과충은 정치권으로부터 “시혜”(施惠)를 받아 과학기술계의 영향력을 기르려 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힘을 모아 압력을 가하여 정치권에서의 제몫을 찾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민주사회에서는 발언권이 적은 분야가 제대로 대접받기란 어려운 일이다. 과학기술계가 그 발언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단지 지역의 대표로 과학기술자가 출마하여 국회나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일이 앞으로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기술자들 사이에 스스로 정치활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야만 기존의 정당에서도 과학기술자들에게 전국구 후보자리를 할애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과충은 또한 기성의 정치가나 행정관료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로비”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예를 들면, 이미 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지를 활용하여 각 정당과 각 정치인들의 과학기술계 입법안에 대한 태도를 분석 소개하는 일은 선거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정치권을 과학기술계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한 과학기술을 정치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언론을 통해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 과충은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제나 국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강조해 왔으나 이런 태도는 앞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음악가와 미술가등 예술인들은 아무도 그들

어의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공동노력을 추구하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3개국의 공동노력도 꼭 필요하다.

서양의 과학기술이 낳은 용어들을 우리 민족의 감각에 더 맞는 용어로 만들어 쓴다는 것은 과학기술을 보다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지식이란 인류 전체에 보편적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당연히 각 민족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보다 민족적으로 표현될수록 그것은 그 민족에게 친근감을 주어 더 발달할 토양을 만들 수 밖에 없다. 과학기술의 용어를 보다 우리 전통에 맞도록 만드는 노력은 곧 <민족 과학>의 시작인 것이다.

21세기의 과충은 용어정비노력에서부터 <민족과학>의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민족과학>의 맥락에서 과충이 다음으로 추구해야 할 과업은 이미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원로과학기술자에 대한 예우의 노력과도 통하는 일이다. 과충은 원로과학기술자들에게 강연의 기회를 마련하고 혹은 약간의 생계보조비를 마련하기에 힘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헌을 사회가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일이다. 예를 들면, 시 몇편이나 소설 몇편을 쓴 문인들은 국어교과서에 크게 소개되어 그 교재를 해설한 참고서에는 사진과 함께 실로 대단한 인물처럼 소개되고 있는 현실이건만 과학기술자로 평생을 보낸 이 땅의 선각자들은 어느 책에도 이름을 남길 수가 없다.

과학기술의 교과서에는 가능한 한 많은 우리 과학기술자들의 이름을 소개함으로써 문인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자도 이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보여 줄 일이다. 과학기술의 창조적인 업적을 남긴 한국인이 없다고 해서 외국인의 이름만 나열한 교과서로 과학기술을 가르치는 일은 과학기술을 영원히 외래문화로 남겨 두는데 이바지할 뿐이다. 어떤 분야를 국내에서 처음 연구했거나 또는 국내에 처음 소개한 인물들을 부각시켜 우리 과학 기술의 발달에 우리 체취를 듬뿍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 과학>의 뿌리를 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원로과학기술자에 대한 진정한 예우가 될 수 있다.

강력한 압력단체가 돼야

2000년대를 맞은 과충은 이제 지금까지의 소극적이었던 과학풍토의 조성을 위한 노력을 뛰어 넘어 적극적인 자세를 가다듬을 때를 맞고 있다. 다가 오는 민주 한국에서 과충은 1백만 과학기술자들의 힘을 집결하여 그 힘을 과학기술자들의 권익신장은 물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과충은 우선 과충을 강력한 조직체로 길러 정부와 사회에 대한 강력한 압력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충은 과학기술을 보는 시각을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야말로 가장 인간적 활동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에게나 문화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

아직도 외래 문화인듯 남아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하루 속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1세기의 과충은 <민족 과학>의 건설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이미 수행해 오고 있는 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그리고 원로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조상 숭배”의 전통을 세우는 노력을 통해 <민족 과학>의 전통은 확립되어 갈 것이다.

이제 한국의 과학기술은 어느 의미에서나 제 1세대의 손을 떠나 발전해 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존경할만한 과학기술의 전통을 후손에게 남겨 주려는 노력이다. 자랑스런 과학기술의 전통이 확립되고 그것이 국민 사이에 널리 알려질 때 우리는 진정한 과학기술 풍토를 만든 셈이 될 것이다. 2000년대의 과충이 짊어지고 나설 역할과 사명이 바로 <민족 과학>의 건설에 있음은 이 때문이다.